



루마니아

I. 일반개황

면적	23.8만 Km ²	G D P	732억 달러(2004년)
인구	2,180만 명(2004년)	1인당 GDP	3,362 달러(2004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가미)	통화단위	Lei
대외정책	2007년 EU 가입 예정	환율 (달러당)	3.26 (2004년)

- 루마니아는 인구규모로 중동부 유럽지역에서 폴란드에 이어 2위이고 1인당 GDP는 4,000달러 (2005년 추정) 수준으로 세계은행이 분류한 중위권 소득국가임.
- 취약한 산업구조가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 되어 왔으며, 2004년 7월에는 IMF와 대기성 차관 협정을 체결하여 경제구조조정을 추진하던 중 2005년 10월 IMF측과의 마찰로 차관조건 이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 2004년 NATO 회원국이 되었고, 불가리아와 함께 2007년 1월에 EU 가입이 예정되어 있으나 정치 불안정과 EU 가입을 위한 개혁조치가 지연되면서 EU 가입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됨.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동향

□ 경제성장 다소 둔화

- 2005년에는 급속한 여신증가 및 소득세율 인하조치로 경제성장이 지속되었으나 고정투자 증가율 둔화와 홍수피해(7,8월) 및 기상악화로 농작물 작황이 부진하여 성장률은 4.0%에

〈표 1〉

주요 국내경제지표

단위 : %

	2002	2003	2004	2005e	2006f
경제성장률	5.1	5.2	8.3	4.0	4.5
재정수지 / GDP	-2.6	-2.3	-1.1	-0.8	-0.5
소비자물가상승률	22.5	15.3	11.9	9.0	7.4

자료: EIU, ViewsWire, January 2006.

그친 것으로 추정됨.

- 2006년에는 긴축 재정·통화정책의 영향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산업생산 증가율도 4% 수준을 상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4.5% 내외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 높은 수준

- 200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0%로 추정되는데, 이는 중앙은행(NBR)의 억제 목표치인 7.5%를 상회한 것임. 2004년 이후 공공부문의 임금인상률이 2005년 말 현재 50%에 달하였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도입한 신규 화폐(Lei)의 평가절상 조치가 수출가격 경쟁력을 저하하는 부작용을 초래함. 200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긴축 통화정책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다소 하락한 7.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적자 개선 추세

- 2004년에는 공공부문 지출 억제, 특히 에너지 가격 조정 및 국영기업 임금인상과 더불어 세수 확대, 조세행정 개선 등을 통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전년의 2.3%에서 1.1%로 개선됨. 2005년 1월부터 소득세율을 16%(법인세: 25% → 16%)로 인하하면서 단일화하였음.
- 2006년에는 부가가치세율(조세수입의 47% 차지) 19% 유지, 근로소득세 인하(5~10%)로 재정수입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교육, 보건, 인프라에 대한 투자 증가 및 공공부문 임금 상승이 예견되면서 재정지출 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외국인투자 유입 지속

- 최근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특히 신규·현대화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여 대규모 공동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등 FDI 유입이 2006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 연중 FDI 유입실적: 11억 달러('02) → 22억 달러('03) → 54억 달러('04)

2. 경제구조 및 정책

□ 취약한 산업구조

- 농업 등 1차 산업이 GDP의 14.7%(2004년)를 차지하는 낙후된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생산성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총수출의 70%는 EU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고, 에너지 의존적인 산업구조로 유가변동에 노출되어 있음. 수출산업은 의류, 신발류, 가구 등 부가가치가 낮은 노동집약적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내산업 기반이 취약하여 주요 소비재 및 자본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실정임.

□ 경제 구조조정 추진 지연

- 체제전환 이후 되풀이된 정치·사회불안, 민영화와 경제구조조정에 대한 관료, 국영기업 관리자, 노조 등 각종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로 주변국들에 비해 경제개혁 추진 성과가 매우 낮았음. 특히, 개혁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그 결과 동국은 체제전환 이후 6차례 IMF와 자금지원에 합의하였으나, 단 한번도 성공적으로 IMF의 지원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음.

□ 화폐개혁 조치 실시

- 2005년 7월 1일, 기존 Leu(또는 ROL)화를 신규 Lei(또는 RON)화로 변경하고 1만 Leu를 1Lei로 대체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이 같은 네 자릿수 평가절상으로 인플레이션 억제, 유로화 도입의 사전적응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3. 대외거래 동향

□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지속

- 2005년에는 급속한 수입증가율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부문 무역 적자 증가 이외에도 투자용 기계류, 기자재 및 자동차 수입 확대로 상품수지 적자가 급증하여 경상수지 적자폭은 GDP 대비 9.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반면, 전통적인 수출품목인 의류, 직물, 금속제품 등의 상품수지 흑자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2006년에는 긴축 통화정책 시행에 따른 Lei의 평가절상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입수요가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84억 달러(GDP의 8.1%)

〈표 2〉

주요 국제경제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2002	2003	2004	2005e	2006f
경 상 수 지	-1,500	-3,500	-5,600	-8,600	-8,400
경 상 수 지 / GDP	-3.4	-6.0	-7.6	-9.3	-8.1
상 품 수 지	-2,600	-4,600	-6,700	-10,500	-11,200
수 출	13,900	17,600	23,500	27,300	31,000
수 입	16,500	22,200	30,200	37,800	42,200
외 환 보 유 액	6,125	8,040	14,616	20,886	-
총 외 채 잔 액	15,700	21,300	27,600	31,500	34,800
총 외 채 잔 액 / GDP	34.3	37.1	37.7	34.0	33.5
D S R	18.9	17.2	15.3	15.3	15.3

자료: 〈표 1〉과 같음.

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외채구조 안정적

- 2000년부터 국제금융시장에서 채권발행을 재개하였으며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이 비교적 충분하여 외채상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 신규채권 발행 증가에 따라 2000년부터 외채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나, DSR 및 외채구조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 2005년 말 현재 총 외채잔액은 GDP의 34.0%인 315억 달러로 추정되며, DSR은 15.3%임. 한편, 2005년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09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월평균수입의 5.4개월 분에 해당됨.

III. 정치·사회 동향

1. 국내 정치 불안 지속

□ 사회주의 체제붕괴 이후 정치 구조적 불안 지속

- 1989년 공산체제 붕괴 이후 동국은 좌파, 우파, 민족주의계열, 소수 헝가리계 등 다수의 정파가 난립하여 왔음. 이런 정치적 환경으로 단일정파가 주도하는 정부구성이나 안정적인 고 일관된 개혁정책의 추진이 어려웠음.

□ 대통령(DP)과 총리(NLP)간의 불화 증폭

- 2004년 11월 28일 실시된 총선에서 중도우익의 국민자유당(NLP)이 승리함으로써 NLP

소속의 타리코누(Calin Popescu Tariceanu)가 총리에 당선됨. 동년 12월 12일 실시된 대선에서는 야당 후보인 중도좌익의 민주당(DP) 총재였던 바세스쿠(Traian Basescu)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연합정부 내 뿐만 아니라 정부와 의회간의 긴장관계가 증폭되어 경제개혁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2대 주요 정당간의 연합정권 분리양상이 지속될 경우, 연정붕괴 및 조기총선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특히 2007년 EU 가입을 앞두고 양당간의 긴장관계로 주요 정책 및 개혁 관련 조치시행이 난관에 부딪힐 경우 EU 가입도 2008년 이후로 지연될 것으로 우려됨.
- 총리(NLP) 주도하에 추진된 2006년 정부 예산편성안(경제성장률 6% 가정)에 대하여 DP 계열은 교육부문에 대한 재정지출(GDP 대비 5% 수준 지출)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 다며 동 예산안에 비판적인 태도를 표명하는 등 정책결정 과정에서 양당간의 대립양상이 격화되고 있음.

2. 사회불안 요인은 적은 편

- 의회 내 좌파와 우파 정당간의 갈등, 정치계의 부정부패 만연 등으로 국민의 정치권 불신이 높은 편이나, 주변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은 실업률(2005년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00년 이후 경제성장 지속,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교체로 사회 불안정성은 크지 않음.
- 인구의 약 90%가 루마니아 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민족 동거에 의한 민족간 분규는 없 으며, 종교적 갈등이나 기타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국내적 갈등요인도 없음.

3. 주변국과 우호관계 유지

- 헝가리와 국내 소수민족 권익문제, 우크라이나와는 흑해지역 해양경계 확장문제 등이 잠재 되어 있으나 심각한 분쟁사태로 발전된 것은 아님.
- 인접국인 불가리아와는 2007년 EU 동시가입을 추진 중에 있고, 러시아와는 2003년 기본 관계 조약 체결을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4. 2007년 1월 EU 가입추진

- 2000년부터 루마니아는 불가리아 등과 함께 EU 가입협상을 시작하여 2004년 12월, 31개 분야에 대한 가입협상을 완료하였음. 루마니아 정부는 2005년 4월 25일 가입조약

(accession treaty) 체결 이후 2007년 1월 EU 가입을 주요 외교정책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06년 4월 최종보고서를 통해 가입준비 사항 등을 평가하여 루마니아의 EU 가입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IV.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1. 국제신인도 및 주요 기관별 신용등급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등급

- S&P: BBB- (2005. 9), Moody's: Ba1 (2005. 3), Fitch: BBB- (2004. 11)
- OECD : 4등급 (2005. 1) → 4등급 (2006. 1)
- I.C.R.G : 64/140 (2004. 12) → 72/140 (2005. 12)
- Euromoney : 66/185 (2004. 9) → 66/185 (2005. 9)
- I. I : 67/172 (2004. 9) → 62/173 (2005. 9)

□ IMF의 루마니아에 대한 경제정책 평가보고서(2005. 10)

- 현재 루마니아의 경제정책 관리에 대하여 대외경쟁력 약화, 거시경제 불균형(재정·임금·통화정책) 심화, 보건 및 교육 서비스 악화, 인프라 격차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함. 이에 대하여 루마니아 정부는 IMF 차관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정책수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루마니아 총리와 재무부장은 재정정책이 잘 수행되고 있으며 IMF 평가는 잘못된 것이라고 일축함.

□ EU 집행위원회의 루마니아에 대한 평가보고서(2005. 10)

- 2007년 EU 가입과 관련하여, 루마니아의 부패방지, 산업공해 통제 및 식품 안전기준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가입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동 가입시기가 1년 이상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문제 제기함.

2. 주요 ECA의 인수태도

- US EXIM : 상업은행 지급보증부 전액인수가능
- 영국 ECGD : 중단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리스케줄링 및 외채상환태도

- 체제전환 이전인 1980년대 초반과 중반에는 파리클럽(2회), 런던클럽(5회)으로부터 대규모 리스케줄링과 채무감면을 받은 바 있으나, 체제전환 이후에는 채무구조의 개선과 지속적인 수출신장으로 국제신인도가 제고되어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함.

V. 종합의견

- 소비증가율 붐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부진,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노동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상승률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등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정치적 상황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거시경제의 불안정이 증폭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음.

【최 은 경】